

IJS JAPAN REVIEW



황혼의 ‘전후’ 앞에서

서동주 |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황혼의 ‘전후’ 앞에서

최근 일본 언론은 2월 28일부터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2023년 8월 25일 1차 방류를 시작으로 도쿄전력은 작년에는 3차에 걸쳐 2만 톤이 넘는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냈다. 이번 4차 방류에서는 17일간 약 7,800톤 이상의 오염수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로 방류될 예정이라고 한다. 도쿄전력은 원전 주변 해역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사성 물질이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으며 오염수에 따른 피해를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도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누출되어 일본 정부가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오염수를 둘러싼 불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오염수 문제는 그것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나는 현재의 논의에 뭔가를 덧붙일 만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한 관계로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보려한다. 즉, 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사건을 패전 이후 ‘전후’라 불리는 시간 동안 ‘전후일본’이 핵에너지에 대해 견지했던 태도라는 관점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결론을 앞서 밝혀두자면, 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사건을 일본이 ‘전후’라고 불렀던 역사적 시간에서 확실히 이탈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전후사의 중대한 분기점에 놓고 싶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한일 간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을 때, 이 사건은 나에게 ‘기시감’과 ‘낯설음’이라는 이질적인 두 가지 감정을 안겨주었다. 먼저 ‘기시감’이 들었던 이유부터 말해보겠다. 이 감정은 체르노빌 원전의 폭발 사고 이후 당시 일본정부와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에서 비롯되었다. 1986년 4월 26일, 당시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방사성 물질이 동북부 유럽까지 확산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그해에만 95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지역 주민들이 대피했고, 폐허로 변해버린 원전 주변은 여전히 무인지대처럼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그때까지 일본인들이 갖고 있던 ‘평화적’이며 ‘안전한’ 에너지라는 원자력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충격과 변화를 가져왔다. 그해 8월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는 핵에너지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래 처음으로 원전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찬성 34%, 반대 41%). 또한 일본인들은 유럽에서 수입되는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주부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반원전 데모가 일어났다. 당시 평론가들은 이 데모를 ‘반원전 뉴웨이브’라 칭하며, 새로운 사회운동의 부상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사건 직후 일본 내 빗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확인되었지만,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발표하는 등 사고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여론에 밀려 11월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여론의 영향으로 북유럽, 터키 등에서 들어오는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 체제를 강화했다. 외부로부터 닥쳐올지 모르는 오염의 공포에 불안을 느낀다는 점에서 당시 일본사회의 모습은 지금 한국사회의 그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 그래서 ‘기시감’이 들었던 것 같다. 다만 이번에는 일본과 한국의 입장이 달라졌을 뿐이다. 과거에는 방사능의 피해를 우려했던 국가(일본)가 이번에는 타국에게 불안을 안겨주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다른 한편 내가 ‘낯설음’을 느낀 것은 다음과 같은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1979년에 일본정부는 방사성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계획을 결정했다가 철회한 일이 있었다. 1979년 일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방사성폐기물안전기술전문부회는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리 방법으로 원전에서 나온 저레벨의 방사성 폐기물을 드럼통에 넣고 시멘트로 굳게 만들어 태평양의 심해에 투기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 보고는 바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과학기술청이 실행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자 태평양 섬들 쪽에서 이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980년 8월에 개최된 태평양 수뇌부 회의에서는 일본의 해양 투기 계획 중지를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었는데, 1981년, 1982년 회의에서도 같은 결의가 이루어졌다. 일본 정부도 회의에 전문가를 파견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설득에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일본정부는 외국의 강한 반대 의견 앞에서 해양 투기 계획을 단념한다. 즉 1985년 1월 당시 일본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총리는 피지와 파푸아뉴기니의 총리

를 만난 자리에서 태평양 현지 주민들의 불안과 영해를 무시한 채 일본이 독단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을 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던 것이다. 약 40년 전에 일본정부는 자국 내의 소위 ‘위험물질’을 외부로 내보내는 결정을 철회했다. 과정은 현재와 닮았지만 결말이 달랐다. 지금의 일본정부는 인접국가 국민들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실행에 옮겼다. 달리 말하면 현재의 일본정부는 자국 내의 리스크를 외부화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이것이 ‘낮설음’의 원인이었다.

내가 ‘기시감’과 ‘낮설음’으로 말하며 서로 이질적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앞서 거론한 두 사건은 전후일본을 지탱하고 있는 어떤 심성에 공통적으로 기반하고 있다. 그 심성이란, 일본은 외부의 위협에 연루되고 싶지 않으며, 동시에 타자가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일은 결코 실행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일본국헌법에 ‘평화헌법’이라는 별칭을 안겨준 제9조의 내용은 이런 심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쟁의 포기’를 명문화한 일본국헌법 9조 1항이 전자의 심성을 대변한다면, 국제 분쟁에 대한 무력 개입을 거절하는 9조 2항은 후자의 심성을 뒷받침한다. 이런 심성을 핵에너지에 대한 태도에 적용하면, 전자가 일본정부의 ‘비핵3원칙(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수상이 천명한 ‘핵을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겠다’는 선언)’으로 나타났다면, 후자는 40년 전 나카소네 수상의 태도 변경으로 표출되었다. 아울러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오랫동안 보류되었던 사정도 그 배경에 스스로가 타자에 대한 리스크가 되지 않겠다는 ‘전후일본’의 집단적 심성이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최근의 광경은 많이 달라졌다. 단적으로 말해 타자에 대해 위협이나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겠다는 관행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해방 방출로 깨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전에 앞서 유력 보수정치인들은 미국과의 ‘핵공유’를 주장하며 공공연하게 ‘비핵3원칙’을 흔들고 있다. 나아가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작년 12월 그간의 무기 금수 정책을 변화를 줄 수 있는 관련 규정과 지침을 개정했다고 한다. 이로써 일본은 무기 완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런 최근의 움직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익숙한’ 일본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음을 강하게 환기시킨다. 이제는 고인이 된 일본의 문예평론가 가토 노리히로(加藤典洋)는 사죄와 망언을 반복하는 관료의 모습을 두고 일본정치는 인격분열에 빠져있다고 말한 바 있지만, 최근에는 ‘망언’의 뉴스는 접해도 그것을 이유로 누군가가 ‘사퇴’했다는 소식을 듣는 일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서 일본정치의 ‘우경화’라는 말을 떠올리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다. 이제 역사문제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일본정치는 소위 ‘전후의 가치’와 결별을 고하고 있다. 요컨대 익숙한 ‘전후일본’은 황혼의 시절에 들어섰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한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조금은 안타까운 감정과 함께 서술했지만, 그렇다고 이걸로 ‘전후’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평화주의를 표방한 ‘전후’의 가치는 정작 일본 정부의 손에 의해 훼손되지만, 동아시아 역내의 점증하는 갈등과 위기는 새로운 ‘전후’의 상상력을 촉구한다. 일본의 내셔널리즘에 의해 손상된 ‘전후’를 트랜스내셔널한 가치로 전환시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사상적 자원으로 되살릴 방법은 없을까? 나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일본의 영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떠올리며 ‘전후’의 탈국가적 갱생을 생각해 본다.



서동주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IJS일본리뷰>는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이슈 및 한일현안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발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기획하고 (재)학봉장학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 필진의 글은 일본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